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박 덕 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차 례 ▶

- | | |
|----------------------|---------------------|
| I. 파리협정의 성립과정 | IV. 향후 기후협상과 우리의 대응 |
| II.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 문제 |
| 1. 기본원칙 | 1.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
| 2. 공동의 장기목표 | 관련 |
| 3. 행동의무와 지원의무 | 2. 기후정의의 실현방안 관련 |
| 4. 감독체계 주요 내용 | 3. 국제적 탄소시장과 국내 |
| 5. 파리협정 이후의 당사국총회 | 감축의 갈등 관련 |
| III. 파리협정과 한국의 이행 문제 | 4. 컨트롤 타워의 부재 관련 |
| 1. 최근 동향 | 5.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 번역 |
| 2. 한국의 이행 문제 | 관련 |
| | V. 마치며 |

* 논문투고일: 2020. 9. 28 / 심사완료일: 2020. 9. 28 / 게재확정일: 2020. 10. 5.

본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6S1A3A2925230). 글의 상당부분은 필자가 편집자로 참여하여 집필한 『파리협정의 이해』(박영사, 2020), 서장 “기후변화대응과 국제조약체계”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 가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힌다.

I. 파리협정의 성립과정

2015년 12월 12일 파리협정이 채택된지 어느덧 5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본 글에서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파리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국내 정책을 살펴본 후, 필자가 갖고 있는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협상에 대한 생각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더반 합의문¹⁾에 따라 출범된 ADP²⁾를 중심으로 신기후체제를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당사국총회는 2015년까지는 새로운 국제문서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ADP는 특히 적응, 재정,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 및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이는 그만큼 파리협정이 다루게 되는 영역이 늘어나고 그 규율 내용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사이 ADP를 통한 협상회의가 파리 당사국총회가 개최되기까지 15차례 개최되었다. 2015년 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ADP 협상회의에서 제네바 텍스트(Geneva Text)³⁾를 마련한 후 약 10개월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쳤다. 결국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는 EU 및 195개국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파리협정이라는 역사적인 결과물을 채택하였다. 이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가 국가별 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⁴⁾의 제출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받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파리협정⁵⁾은 기후변화협약 제17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협약의 의정서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다만, 파리협정 전문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문장⁶⁾ 및 제2조 제

1) 박덕영·유연철 외 공저, 『파리협정의 이해』(박영사, 2020), 69면. 더반 결과물(Durban Outcome)이라고 한다.

2) 위의 책, xxii면의 약어표를 참고.

3) UNFCCC.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ADP), Geneva Climate Change Conference - February 2015, FCCC/ADP/2015/1, Negotiating Text available from <https://unfccc.int/documents/8660>.

4) 박덕영·유연철 외 공저. 앞의 책, xxiv면의 약어표 참고.

5) Paris Agreement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Dec. 12, 2015, T.I.A.S. No. 16-1104.

6) The Preamble of the Paris Agreement reads as: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Being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Pursuant to the Durban

2항7)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줄곧 언급함으로써 협정이 기후변화협약을 토대로 발전한 국제적 합의라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파리협정은 여전히 발효 중인 교토의정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써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기후체제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은 대체 관계에 있는 협정이 아니라, 기후변화협약 하의 별개의 협정인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국과 G77 국가들로 구성된 개도국 그룹, 선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EU 및 Umbrella 그룹,⁸⁾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적인 입장인 대한민국,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로 구성된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EIG)⁹⁾ 등 다양한 협상그룹들이 파리협정 채택을 위한 협상에 임하였으며, 다양한 협상그룹의 이해를 반영하다 보니 파리협정이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다소 약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즉, 파리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감축의무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NDC에 의하는데, NDC는 당사국 스스로가 결정해 제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상향식 방식(bottom-up approach)라고 할 수 있다. 또 당사국총회에서 논쟁거리가 되었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도 결국 별개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결과적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의 타협과 절충의 산물이 바로 파리협정인 것이다.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성립하였는데, 채택일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2016년 11월 4일 발효하였으며, 2020년 5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89개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다. 애초 동 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하기까지 약 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Post-2020”이라는 표현이 자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established by decision 1/CP.17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at its seventeenth session, In pursuit of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nd being guided by its principles, including the principle of equity an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7)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2 of the Paris Agreement reads as:

This Agreement will be implemented to reflect equity and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8) 박덕영·유연철 외, 앞의 책, 504면 부록 2의 UN기후변화협약 협상그룹 표를 참고. Umbrella Group의 구성현황은 호주, 벨라루스, 캐나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 12개국이다.

9) 2017년 COP23에서 조지아가 새로이 가입하여 현재는 6개국이 EIG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주 사용되었으며,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협정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파리협정 불참을 공언하자, 전 세계는 상호 협력에 기초하여 파리협정의 조기 비준과 발효로 화답하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트럼프의 불참 선언이 파리협정의 발효를 앞당기게 된 것이다.¹⁰⁾

II.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1.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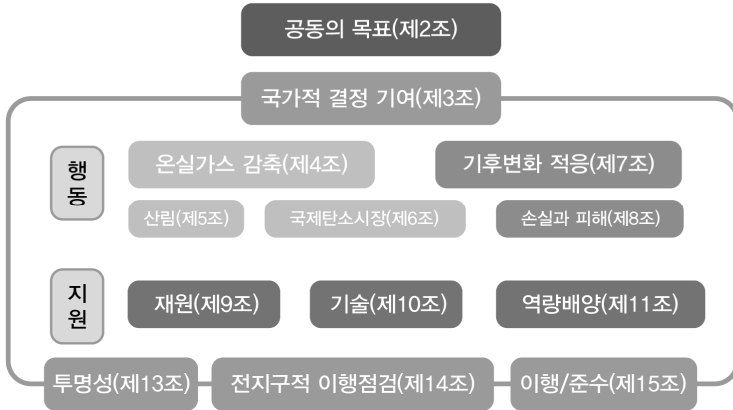
파리협정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들을 전문(Preamble)에서 재확인하면서 기존 교토의정서의 부속서 I 국가들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동참하게 되는 개도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원칙들과 개념들을 명시하였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기후변화협약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동의 그러나 차이가 나는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과 함께 당사국들의 개별 역량(respective capabilities) 및 국가별 상황(national circumstances)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전문에 포함했다.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새로운 개념들도 전문에 함께 명시되었다. 해양을 포함한 전 생태계의 건전성과 생물다양성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형성된 개념인 어머니 지구(mother earth)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후정의(climate justice)라는 개념을 직접 전문에서 언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좀 더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¹¹⁾

1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과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파리협정 탈퇴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파리협정 제28조에 따르면 협정의 발효로부터 3년 후에 서면으로 탈퇴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로부터 1년 후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에 발효하여 미국의 탈퇴 통보는 2020년 11월 4일이 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하루 전인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11) 파리협정과 국제기후변화법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파리협정의 이해』 외에 박덕영 외 번역, 『국제기후변화법제』(박영사, 2018); 박덕영 외 번역, 『기후변화와 국제법』(박영사, 2020)을 참조.

파리협정의 주요 조항 구조



2. 공동의 장기목표

교토의정서에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온도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애초에 온실가스의 감축을 정량 혹은 비율로써 정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에 이르는 시기를 정하는 방식 등도 고려되었지만, 코펜하겐 합의¹²⁾에서 이미 등장한 바 있는 온도목표가 파리협정의 장기목표가 되었다.

파리협정은 제2조에서 협정의 장기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세계적 대응의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기온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well below) 제한하고,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장기목표로 설정¹³⁾하였다. 선진국이 주장한 2℃ 이내 제한과 도서국가들과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개도국들이 제안한 1.5℃ 이내 제한을 타협하여 양측의 주장이 모두 녹아들어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장기목표를 제시하면서 형평(equity)과 공동의 그러나 차이가 나는 책임의 원칙을 반영하여 목표를 이행할 것을 재차 확인한 점은 개도

12) 코펜하겐합의, 도하개정문 등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채택된 각종 국제조약과 합의문서 등은 박덕영(편), 『기후변화 국제조약집』(박영사, 2017) 참조.

13) 박덕영·유연철 외 공저. 앞의 책. 97면 파리협정의 목표.

국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파리협정은 제2조에서만뿐만 아니라, 제4조 제1항¹⁴⁾에서도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온도목표가 아닌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당사국들은 21세기 중반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의 최고 정점에 이르러야 하며, 21세기 후반부에는 생성되는 온실가스와 온실가스의 흡수가 균형을 이루어 지구상 온실가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행동의무와 지원의무

파리협정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당사국의 행동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국가별 기여방안, 즉 NDC의 제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방식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제7조는 적응, 제8조는 손실과 피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NDC는 기본적으로 NDC가 감축, 적응, 재정,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6개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고,¹⁵⁾ 개도국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개도국들은 자신의 감축목표와 선진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임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도달하고 그 후에는 배출을 급속도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개도국의 경우에는 배출 정점의 도달이 지연될 수 있음을 함께 확인하였다.¹⁶⁾

각 당사국들은 제4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더 나아가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목표를 지

14)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4 of the Paris Agreement reads as:

In order to achieve the long-term temperature goal set out in Article 2, Parties aim to reach global peak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s soon as possible, recognizing that peaking will take longer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and to undertake rapid reductions thereafter in accordance with best available science, so as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anthropogenic emissions by sources and removals by sinks of greenhouse gases in the second half of this century, on the basis of equity, and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15) 오진규, 『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정 협상 경과 및 시사점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참조.

16) 오진규, “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채택 내용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11호(2019)의 내용을 참고.

속적으로 높일 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NDC에 따른 감축의무는 해당국이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행한 대세적 약속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NDC에서 정한 감축목표는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국가의 의무로도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결과적인 의무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과정상의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NDC와 관련해서도 공동의 그러나 차이가 나는 책임 원칙이 적용되며, 제4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출된 NDC는 교토의정서의 부속서 체계에서와는 달리 조약의 부속서가 아니라,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운영하는 등록부(registry)¹⁷⁾에 기재된다. 한편 협정 제5조에서는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통한 배출량의 흡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당사국들은 NDC 달성을 위해 자국 내에서의 감축¹⁸⁾에 힘써야 하겠지만, 파리협정 제6조는 교토의정서의 시장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해외감축을 통하여 자국의 목표 달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새로이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감축결과(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TMO)¹⁹⁾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그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²⁰⁾ 제4항에 따라 교토의정서상의 CDM이나 공동이행제도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른바 협력적 접근법이나 비시장 접근법을 통해서도 목표를 달성²¹⁾할 수 있다. 아직 이 체계들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APA(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²²⁾를 통한 논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²³⁾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제7조에서 기후변화에

17) NDC registry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ages/Home.aspx>.

18) IPCC, *Climate Change 2014: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1266 참고.

19)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파리협정 이행규칙안내서』, 2019, 62면 참조.

20) 한국법제연구원,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교토의정서 유연성체제와의 비교 및 향후 전망』(한국법제연구원, 2018)의 내용을 참조.

21)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nalysis and Commentary*(Oxford: OUP, 2017), p.184.

22) 파리협정 특별작업반을 뜻한다.

23)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COP24에서 대부분의 조항과 관련한 세부 이행규칙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제6조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이행규칙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대한 적응방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인류, 생활 터전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과 국제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특히 미약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협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개도국의 적응조치는 선진국의 감축의무 및 지원의무 이행과 연결되어 있는데, 개도국의 적응 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리협정 제8조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 문제가 당사국들의 행동의무에 편입되었는데, 이는 개도국이 줄곧 주장해온 바가 어느 정도 관철된 결과이다. 선진국들은 적응을 위한 자발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과 결부되는 것을 꺼렸다. 이에 따라 동 조항이 배상책임(liability)이나 보상(compensation)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 결정문에서 확인하였는데, 이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지원할 용의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비록 협정 제8조가 선진국의 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응과는 별개의 범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별개의 조문을 통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파리협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와 제12조는 지원체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은 주로 선진국의 의무이지만, 여타의 당사국들도 이에 참여하도록 장려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서는 2020년부터 매년 최소 1,000억 달러 상당의 재원을 조성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²⁴⁾하고 있다. 향후 이의 달성 여부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대립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제10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의 협력, 특히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술이전’이라는 기존의 용어에서 ‘기술의 개발과 이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11조는 당사국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당사국 간 협력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규정하였다. 제12조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공인식 제고 노력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24) 이은희, “제 21차 당사국총회 파리협정 결과 및 CCS”,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 Issue Report), 제14호, 2016, 1면.

4. 감독체계 주요 내용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비교적 느슨한 의무체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다소 고안되어 있다.²⁵⁾ 우선 협정 제13조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이후의 당사국총회 결정을 통해 도출된 각종 보고의무를 종합하고 강화하여 이를 하나의 투명성 체계(transparency mechanism)에 집약시켰다. 동 체계는 원칙적으로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보고의 대상 역시 행동의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원의무에 대한 것까지를 포괄한다. 여기에는 각종 보고와 정보 제공이 포함된다. 보고는 원칙적으로 격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그룹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투명성 체계가 단기적 목표의 이행과 그 점검을 위한 것이라면,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은 장기적 목표에 대한 이행 정도와 향후의 발전 방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협정 제14조는 각국의 감축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5년마다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점검은 2023년부터 5년마다 실시되어야 하고, NDC 제출의 주기 역시 5년으로, 새로운 NDC 제출 시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실시되는 이행점검의 결과를 각국이 어떻게 자국의 NDC에 반영하고, 지구가 감내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파리협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실시방법, 이에 따른 강화된 감축방안의 도출방안 등 향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많은 사안들이 아직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파리협정 제15조는 이행과 비준수 대응 메커니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행준수를 위한 메커니즘은 단일 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되 강제적이거나 징벌적인 성격이 아니라 촉진적인(facilitative)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교토의정서에서 제재적 이행강제가 국가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한 당사국들은 보다 촉진적이고 보조적인 준수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동 체계는 협정 비준수에 대한 비난보다는 준수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그 역할이 훨씬 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

25) 이는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강력한 의무체계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 파리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가 많아질 수 있고, 국제사회가 특정 조약에의 가입을 강제할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국제환경조약들에서는 국가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후 당사국총회의 세부 협상결과에 따라 구체적 업무 역할이 정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21조에서는 파리협정의 발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최소 55개 당사국이 비준하고, 비준한 국가들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일 경우에 발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발효 요건에 따라 2016년 11월 4일에 발효하였다.

5. 파리협정 이후의 당사국총회

파리협정 성립 당시부터 예고된 바와 같이 파리협정은 여전히 골격만 갖추었을 뿐,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였다. 이는 유엔기후체제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파리협정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도 반영된 결과이다. 교토의정서에서부터 우선 규범을 출범시킨 후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하는 방식이 시도됨에 따라 점진적이고 소프트한(경성이 아닌 연성의) 규범 형성의 과정은 유엔기후체제에 있어 전형적인 것이 되었다. 게다가 파리협정의 철회(withdrawal) 내지 취소(cancellation)를 줄곧 천명한 바 있던 도널드 트럼프의 영향으로 파리협정은 출범(발효)이 예정되었던 2020년보다 훨씬 빠른 2016년 발효를 위한 요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그 결과 파리협정 당사국회의의 회차는 협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때까지 본래 차수에 일련번호를 추가로 부여하여 제1-1차, 제1-2차, 제1-3차 등의 차수로 진행되었다.

2016년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제12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²⁶⁾ 및 제1-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²⁷⁾)는 파리협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작업 프로그램 협상을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하면서 2018년, 즉 제24차 당사국총회(제1-3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에서는 그 결과물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는 파리협정이 채택될 당시 파리협정과 함께 채택된 결정문(Decision 1/CP.21)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이를 두고 파리협정 작업프로그램(Paris Agreement Work Program: PAWP)²⁸⁾이라고

26) 박덕영·유연철 외 공저. 앞의 책, xxvii면의 용어해설을 참고. 교토의정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UNFCCC의 당사국총회(COP)가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7) 박덕영·유연철 외 공저. 앞의 책, xxvii면의 용어해설을 참고. 파리협정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UNFCCC의 당사국총회(COP)가 파리협정 당사국회의(Meetings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8) Available at:

일련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파리협정을 위한 임시작업반인 APA에 가장 많은 업무가 위임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의 부속기구인 SBI 및 SBSTA 등에도 파리협정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여러 사안들이 위임된 바 있다.²⁹⁾

2017년 피지를 의장국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본에서 열린 제24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제14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및 제1-2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는 마라케시에서 확인된 작업일정을 재확인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017년 제23차 당사국총회를 기점으로 당시까지 정리된 성과는 그렇게 가시적인 것은 아니었다. 다만, 많은 국가들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관련된 중간회의 및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각 당사국의 비공식적인 의견교환과 논의과정에 대한 비공개적 기록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기록의 축적은 비단 정책적 방향 설정에 관한 것에 머물지 않고,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것까지를 포괄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여러 옵션들을 포함한 협상안을 준비하여 이후의 협상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 APA, 협약의 보조기관인 SBI, SBSTA 등을 통하여 파리협정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 3년간의 협상의 결과는 2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마라케시 합의문과 마찬가지로 반대한 형태의 구체적 이행규정(rule book)³⁰⁾으로 정리 예정에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130여 페이지에 이르는 결정문이 나오게 되었다. Rulebook 협상이라고도 불리는 일련의 협상의 결과는 2018년 대부분 타결되었으나, 아직 협정 제6조의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는 등 미해결 과제들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³¹⁾

그 후 2019년 12월 마드리드 당사국총회와 2020년 글라스고 당사국총회 결정을 통하여, 카토비체에서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9년 마드리드에서는 시장 메커니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paris-agreement-work-programme>.

29) UNFCCC, Joint reflections note by the presiding officers of the APA, the SBSTA and the SBI, Katowice Climate Change Conference (Session APA-SBSTA-SBI). 2018. Available at: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APA_SBSTA_SBI_2018_Informal.pdf.

30) 카토비체 이행규정(rulebook) 합의로 파리협정 제13조 투명성 메커니즘에 대한 방식, 절차, 지침(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 MPGs)이 마련됨(출처: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s://www.gihoo.or.kr/portal/kr/community/data_view.do?p=1&idx=20201&column=&groupname=data&groupid=&f=1&q=

31) 세부이행규칙 의제 17개 중에 16개가 카토비체에서 합의되었으며, 나머지 남아 있는 1개 의제가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것이다.

즘에 대한 논의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2020년 11월에 글라스고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제26차 당사국총회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다음 해인 2021년 11월 1~12일로 연기되고 말았다.

III. 파리협정과 한국의 이행 문제

1. 최근 동향

교토의정서의 제2차 의무이행기간(2013~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1~5위 대국들이 모두 참여하지 않은 데다,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의 중요한 세부쟁점들이 타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기후변화대응체제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결국 2012년 도하개정은 발효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토의정서의 제2차 의무이행기간은 성립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2015년 12월 파리에서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빅플레이어인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상을 타결하여 파리협정을 채택할 수 있었다.

비록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또 취임 이후에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바 있기는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2018년을 비롯하여 최근 수년간의 여름의 폭염을 통해 깨닫게 된 바처럼³²⁾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인류를 끝내 멸종시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32) 최근의 폭염사태 등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 부통령이자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 고어가 기획한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2006), 불편한 진실 II(2017) 등을 참조.

2. 한국의 이행 문제

1) 전반적 경향

2015년 12월 파리 당사국총회는 Post-202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새로운 조약인 파리협정을 채택하였고, 기후변화협약을 위해 각 당사국은 INDC를 사전에 2015년 10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지금까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리비아를 제외한 모든 협약 당사국들이 INDC/NDC를 제출한 상태이고,³³⁾ 그 중에서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40%, 캐나다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중국은 203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2030년까지 단위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한국은 2030년까지 BAU³⁴⁾ 기준 37%를 감축하기로 약속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혀,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국제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최종 INDC를 제출하기 전인 2015년 6월 11일에 4가지 감축 목표안을 제시하였다. 이 네 개의 목표안은 ①안: 2030년 온실가스 BAU의 14.7% 감축, ②안: 2030년 온실가스 BAU의 19.2% 감축, ③안: 2030년 온실가스 BAU의 25.7% 감축, ④안: 2030년 온실가스 BAU의 31.3%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네 개의 목표안은 모두 2020년의 목표치인 5억 4,300만 톤보다 높으므로, 네 개 목표안 중에서 하나를 채택할 경우 한국은 리마선언의 후퇴금지의 원칙³⁵⁾을 거스르는 첫 번째 국가가 되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게 설정하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외교적 압력에 따라 한국 정부는 ③안의 25.7%를 채택하되, 11.3%는 해외 감축이나 해외배출권을 매입하여 상쇄하기로 하여 총 37%의 감축목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감축목표에 대하여 경제계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암 덩어리

33) 파리협정이 채택되기 전인 2015년 상반기에는 INDC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파리협정에서는 NDC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파리협정 189개 당사국 중에서는 186개국이 NDC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3개국은 INDC를 제출한 상태로 되어 있다.

34) BAU는 Business As Usual의 약어로 아무런 감축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전망치를 의미한다.

35) 정지원·문진영, “리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결과 및 시사점”, 『KIEP』, 제15권 제2호(2015) 참조.

라고 비난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한 국내기업들의 추가 감축 여력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가야 하는 올바른 방향이라면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갖고, 이를 기업의 기술혁신의 계기로 삼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GCF³⁶⁾ 사무국 유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국내적으로는 2010년 1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기후변화대응 법제의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협력기구인 CTCN³⁷⁾의 한국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비록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³⁸⁾는 연기되었지만,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한층 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 감축목표 로드맵의 수정

2018년 6월 28일 문재인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2월에 발표했던 기존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기존 로드맵에서 가장 문제시되었던 부분은 국가 감축목표 중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11.3%를 해외감축 및 해외배출권 구입을 통해 국외감축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었다. 이번 수정안에는 이 11.3%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해외감축 11.3%를 축소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감축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11.3%의 숫자를 줄이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감축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단들을 끼워 넣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바로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산림 흡수원을 통한 감축이다. 우리나라가 2015년 파리협정 당시 제출한 감축목표 문서에는 산림이 흡수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정하였는데 이제 와서 산림 흡수원을 감축량에 넣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림이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파리협정 채택 당시보다 점점 줄어들 예정인데, 이 줄어드는 흡수량을 가

36) Green Climate Fund(녹색기후기금)의 약자, 홈페이지: <https://www.greenclimate.fund/>.

37)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의 약자, 홈페이지: <https://www.ctc-n.org/>.

38) 환경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소개: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92&orgCd=&condition.code=A3&seq=5207.

지고 ‘감축노력’으로 인정받겠다는 발상이다. 정부는 산림 흡수량 2,200만 톤을 전부 감축으로 인정받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³⁹⁾ 국제사회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남아 있는 해외감축 2%도 문제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감축비용이 드는 것인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조달한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2%만 해외감축을 하려고 해도 2030년까지 막대한 해외배출권 구입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다가 배출기업들이나 실제 배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메꾸게 될 수도 있다. 정작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가장 확실한 감축 여력이 있는 전환 부문(발전 부문)은 확정적인 추가 노력이 거의 없다. 4% 정도의 추가감축 잠재량은 ‘확정’이 아니라 ‘추후 확정’이라고 한다. 기존 로드맵을 애써 수정하는 판국에 ‘추후 확정’으로 여지를 남겨 둔 것도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나라가 2009년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배출량 목표는 5억 4,300만 톤인데 이미 실제 배출량은 7억 톤에 이르고 있다. 현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전환을 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그린 뉴딜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부터 시행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서는 화석연료 감축과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실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필요시마다 대국민연설로 화석연료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이다.

3) 향후 과제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저탄소 경제와 에너지전환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고 장기적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의 일원이자 G20회의의 성원이라는 선진국의 지위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WTO 협상이나 교토체제 하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39) 대한민국 정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2018. 7)을 참고,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540853>.

그러나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로, 한국이 선진국의 범주에 속하느냐, 개도국의 범주에 속하느냐의 논란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에 발맞추어 대외신뢰도를 꾸준히 높여 나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타당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어머니 지구를 지키고,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IV. 향후 기후협상과 우리의 대응 문제

1.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관련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인가, 선진국인가? ITC 기술과 4차 산업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선진국이라고 할 것이지만, 어디든 협상장에 가면 “우리는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 정부가 가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0월 25일,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WTO 농업협정상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⁴⁰⁾ 서구 언론들, 특히 미국 언론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례로 로이터 통신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4번째 경제대국이며, 개도국 지위가 스스로 지정된 것(“self-designated”)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40) 김규호, “우리나라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자기선언’의 변화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참고. 2019년 10월 25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협상 상 개도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2019년 7월 26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일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 구매력 기준 GDP 상위 10위권 등의 선진국 기준을 내세우면서 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시키는 국가는 개도국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에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계속 주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세계은행에서 정한 개발도상국 기준에 들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는 1996년 OECD에 23번째 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개발도상국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다. 우리 정부가 국익을 앞세워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적 대응을 소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제는 국제협상의 무대에서 국가이익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구이익, 기후정의, 나아가 미래세대를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다.

2. 기후정의의 실현방안 관련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를 보면, 개발이익과 환경정의 사이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유엔기후변화체제에 자리매김한 원칙인 공동의 그러나 차이가 나는 책임 및 개별적 역량(CBDR-RC⁴¹⁾) 원칙에 따라 개발도상국은 산업화 때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선진국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고, 동시에 자신들도 발전할 권리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현재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후변화가 곧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는 과학계의 경고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자기 국경 테두리 내에서의 발전만을 외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공허한 것으로 느껴진다. 정의(justice)는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적어도 지구온난화 대응에 있어서의 기후정의는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3. 국제적 탄소시장과 국내감축의 갈등 관련

2018년 6월 28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대가 큰 탓이었는지 그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국가별기여방안(NDC)에서 BAU 기준⁴²⁾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고, 목표달성을 위해 애초 11.3%에 해당하는 감축

41)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의 약자이다.

42) Business As Usual의 약자로 배출전망치를 뜻한다. BAU란 흔히 있는 일을 일컫는 관용표현인데, 기후변화 현상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감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의미한다(출처: 월간 국토 2010년 1월호 용어풀이).

분을 해외감축이나 국제적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으로 구입하여 의무를 다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수정안을 통해 이 수치를 2%로 떨어뜨린 것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방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즉, 우리 정부는 국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우회로’를 찾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산림 흡수원에 의한 감축 내지 이러한 조림·재조림·황폐화 방지라는 방법을 통한 배출권의 확보인데, 과연 이 방법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산업 내부적으로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 세계적 친환경 경쟁체제에 발맞추어 국내의 산업경쟁력을 키워야 할 정부가 산업발전의 방향과 신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의 문제를 재검토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루어 온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등 친환경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4. 컨트롤 타워의 부재 관련

정부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부처 간 이익이 상호 충돌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많은 정부기관에서 참여하는 이유 역시 기후변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가 사전에 조정되지 않은 탓도 큰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협상에서는 기후변화대사를 중심으로 협상전략과 목표가 수립되었지만, 국가의 기후변화정책을 만들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무조정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문성과 리더십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생긴다.

정부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쇄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결정되고, 이해관계가 조율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회도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5.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 번역 관련

조약은 공식언어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말은 많은 다자조약에서 공식언어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에서 번역한 조약문을 토대로 그 내용을 파악한다. 법원에서도 조약의 원문을 찾아보기보다 번역본에 의존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런데 파리협정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조약번역 관행에는 문제가 있어 지적해보고자 한다. 파리협정 영문본에는 각 당사국이 해야 할 임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shall, should, will, be to 등 다양한 술어가 사용되고 있다. 파리협정의 번역본에서는 shall을 그동안의 관행대로 “한다”로 옮기다 보니, should를 “하여야 한다”로 번역하고 있다. 또한 국제조약상 정치적 의지의 표현인 will은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shall이 가장 강한 법률상의 의무를 나타낸다는 국제법 전공 학자에게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법학 전공 학생들이나 보통의 일반인들이 느끼는 어감상으로도 매우 어색한 일이다. 단지 그동안의 번역 관행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조약의 번역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V. 마치며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동시에 이룩한 지구상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사는 재벌에 대한 집중지원과 불균형 성장론으로 대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50여 년이 오로지 경제만을 위해서 달려온 시대였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시민사회의 성숙과 인권신장, 기후정의 실현과 환경보호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발전과 행복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부탄이나 방글라데시 국민이라는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경

제적으로 그들보다 나을지언정, 그들보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제 는 우리도 더 가지는 것에 대한 맹목적 추구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삶을 추구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제 지구환경은 어느 특정 국가 가 나서서 개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지구환경 개선이라는 대명제 앞에 항상 그래왔던 국가이익 타령을 이제는 멈추고 기후정의 실현을 추구해야 할 때 이다.

어느 특정 국가가 두려워, 어느 특정 기업집단에 휘둘려서 우리의 정책 시 행을 주저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 신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인류공동선을 추구해 야 할 때가 되었다. 경제만 앞세우지 말고, 지구의 미래와 우리 후속세대가 살아 갈 환경을 생각하면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국정지표가 수 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멀리 그리고 길게 내다보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이다.

주제어 :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국가별 기여방안, 감축, 적응, 전지구적 이행점검, 기후협상

<Abstract>

A Study on Key Contents of the Paris Agreement
and Korean Response to Implement Korean NDC
and Futur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Deok-Young PARK

On December 12, 2015, the COP of the UNFCCC adopted a new treaty called the Paris Agreement to combat climate change issues. As its five years anniversary approaches, the author examines the key contents of the Paris Agreement, such as common targets of the Agreemen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mitigation, adaptation, transparency, global stocktaking, etc.

And then the author critically analyses Korean NDC and its attitude towards climate change issues including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and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and further urges alternative way of solutions for implementing Korean NDC, that is doing our best efforts to implement Korean NDC domestically rather than using ITMOs or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Finally the author critically analyses Korean attitudes towards climate change negotiations in the past, and suggests more affirmative attitudes to climate change issues. Korea needs to declare that Korea is not a developing country, and should do more positive roles in climate change negotiations considering its status in international community, rather than thinking more about national interest or economic gains.

Key Words : UNFCCC, Paris Agreemen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 Mitigation, Adaptation, Global Stocktaking, Climate Change Negotiations

